

해란시리즈 IIUS

Expert Notes 2026-21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Institute for Interdisciplinary Unification Studies

한미동맹의 전환기,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26년 09월 04일

Ellen Kim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연구위원

엘렌 김은 한미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학술 프로그램 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미 관계, 북한, 미중 경쟁, 경제적 강압, 핵심 광물이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과거 동맹의 핵심 과제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미·중 전략 경쟁, 북·러 군사 협력, 경제 안보, 첨단 기술과 공급망, 대만해협과 인도태평양 안정까지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관심과 한국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동맹의 상호성이 강조되는 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오히려 더욱 직접적이고 복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어떤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동맹을 결속시키며 역내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이다.

북한의 위협은 커지는데 동맹의 역할은 넓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핵무력을 사실상 국가안보전략의 중심에 놓고 핵탄두와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더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의 경험과 드론 운용 군사기술을 축적하고,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량의 포탄을 제공해 북한 미사일의 성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한반도에서 비대칭적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드론과 사이버 공격 등 제한적 군사 도발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한반도를 넘어 더 광범위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026년 미국 국방전략 보고서(National Defense Strategy)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면서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역시 미국의 보호를 제공받는 전통적 동맹국을 넘어 군사력, 방위산업, 조선, 반도체, AI 등에서 미국의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억제 수요는 증가하는데 미국의 전략적 자원과 관심은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으로 인해 인도태평양에서 타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반드시 한미동맹의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이 더 많은 방위 책임을 부담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역적 임무까지 확대되며 연합방위체제의 구조까지 동시에 조정된다면, 각각의 변화가 합리적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한 안보 공백을 만들 수 있다.

동맹 현대화가 위협의 이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한미동맹의 핵심 과제는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여러 변화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리하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역량과 책임을 확대하는 문제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되어 있으며, 대북 외교는 북한의 핵 능력을 어떻게 제한하고 억제할 것인가의 문제다. 각각 별도의 정책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정을 위해서는 이 세 개의 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조화롭게 작동해야만 한다.

그러나 최근 북미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기간과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 세 개의 축이 과연 빈틈없이 작동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상호성뿐 아니라 동맹의 딜레마인 연루와 방기의 문제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는 동맹 현대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한미 양국이 과연 동일한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진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개별 사안별로 분리해 판단해서는 부족하다. 한반도 방어에서 한국군의 역할 확대,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군사태세 변화, 그리고 대북 협상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이러한 변화들이 결합되어 한반도 전체적인 억제 태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 축이 합리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동시에 추진될 경우 그 누적 효과가 동맹의 억제력을 약화시키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특히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장거리 핵 위협을 줄이는 것과 한국이 직면한 단·중거리 핵 위협을 줄이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향후 어떤 형태의 북미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미국의 위협은 감소하지만 한국의 위협은 그대로 남거나 오히려 커지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안정이 역내 안정에 중요한 만큼, 역내 안정 역시 한반도 안정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성공은 이러한 변화들이 하나의 큰 전략적 틀 안에서 세밀하게 조율되어 한미 양국의 안보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확장 억제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제6차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핵 위기 시 협의 절차, 정보 공유, 핵·재래식 통합, 연습 및 훈련과 전략적 메시지 등 협력을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적 진전은 중요하지만, 확장억제의 신뢰성은 회의체의 존재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북한이 초래하는 실제 위기에서 한미가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지휘체계, 군사태세, 정기적 훈련과 정치적 의지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의 재설계: 역할분담과 전략적 상호성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 변화된 안보환경에 맞게 역할과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그 사이 공백이 없도록 양국이 긴밀하게 조율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반도 방위에서 더 큰 책임을 맡고, 미국은 핵우산·전략자산·정보·우주·사이버 등 한국이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동맹은 군사안보를 넘어 반도체·AI·조선·방산 등 기술과 산업 역량을 결합하는 상호의존적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국도 더 이상 일방적으로 안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적 자산을 가진 파트너다.

대북 정책에서도 대화 자체보다 북한의 계산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억제력과 압박, 외교적 유인을 결합해 북한이 협상에 나설 실질적 동기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한미동맹의 미래는 범위를 얼마나 넓히느냐보다 북한 억제에 더 확실하고, 기술·산업에서는 더 상호적이며, 이해충돌에서는 더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동맹을 만드는 데 달려 있다.

KEI is registered under FARA on behalf of th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Additional information is available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

한미경제연구소(KEI)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대신하여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련 추가 정보는 워싱턴 D.C. 소재 법무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